

야권 “尹, 더이상 대통령 자격 없다”

야 5당,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민주당 추산으로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작은 손톱만 한 이익을 위해 거대한 파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제하기 어렵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단 일분일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



“내란행위 즉각 수사하라” 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 대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야5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 이재명 대표 “주권자인 국민께서 함께 해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범죄인 한 명일 뿐” 목소리

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는 것이 국민과 나

라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를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과 함께 침묵할 건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윤석열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며 “윤과 공범들이 탄핵당함은 물론 형사 소추와 재판장에 설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尹을 즉시 탄핵하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후 국회에서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가결로 인해 4일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것과 관련,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도당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서울의 밤을 목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포장한 친위 쿠데타를 실행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며, “조국 당대표가 공언한 대로 그야말로 1일 천하의 내란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전혀 충족

“비상계엄으로 포장한 친위 쿠데타... 1일 천하의 내란 행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행된 불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고자 시도한 것은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불법 계엄에 맞서 지난밤 국회 앞에 모인 애국 자유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며, “또한 국회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수호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였고, 계엄군을 국회로 난입하게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우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며 “국회는 헌법과 법치의 수호자로서 탄핵소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독재적 행태를 끝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며, “탄핵 이후에도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헌정 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히며,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의 당직자가 참석해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4일 오전 9시경 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안전·생업에 지장 없도록 최선”

운동목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尹 비상계엄 등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4일 오전 9시경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및 4일 오전 4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 도청 조치 현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에서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도청에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경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표에 따라 긴급하게 도청으로 출근해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열어 도청에서 취할 사항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후 4일 0시에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점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상계엄 시행에 따라 0시 24분경 도청 직원 1/3에 해당하는 팀장급 이상 및 필수 요원 등 약 600여명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해 긴급히 출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시의적절한 조치

를 취했으며, 35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이어갔다.

이후 오전 4시 30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에 따라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청에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동향과 중앙부처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기업체의 동향과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계엄 해제 선포가 이루어진 지난 6시간 동안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도민들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변화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만호 기자

“헌정질서 파괴범尹 퇴진이 국민의 명령”

민주 전북도당,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국회에서 4일 오전 1시경 계엄 해제 건의안 가결로 인해 4일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열은 즉시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 윤석열의 45년 만의 비상계엄 쿠데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단호한 결의로 단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며 “이것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윤석열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에 자격이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도 모자라 군사독재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자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

회’를 시작으로 윤석열의 퇴진을 위한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대한민국은 1919년 3·1 독립선언으로 출범한 임시정부부터 ‘민주공화국’을 선포했고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천명해왔다. 무력을 앞세운 군사독재로 민주주의는 지체되고 유린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끝내 민주화를 성취했다. 수많은 청년, 학생, 국민의 희생을 이룬 피와 땀의 결과였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민주화 여정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의安危를 맡길 수 없고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만호 기자

“尹, 민주적 원칙·국정운영 능력 상실”

전북자치도의회, 퇴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원 일동 명의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경 계엄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진은 여전하다.”며 “민위의 전당인 국회 진압을 시도한 비상계엄의 불투명한 절차와 부조리한 명분도 문제지만, 지난밤 우리가 목도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적 헌정질서의 파괴였다.”고 했다.

도의회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적 리더십 대표자이자 결정체로 우리를 대변하는 위상과 책임을 갖는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그 위상과 책임을 스스로 훼손하고 저버렸다.”고도 했다.

이어 “정상적 요건도 명분도 없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의회를 위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단박에 추락시켰다.”며 “지난밤의 혼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지킬 수 없고 국정 운영의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외위환, 국민의 삶이 어려운 민생 위기와 전쟁이 범람하는 신냉전 국제질서를 헤쳐 나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고 위헌 불법 계엄령을 조장해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한 인사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尹 계엄 선포에 뿔난 도내 시민단체

“반헌법 정권, 즉각 사퇴해야”

“윤 정권이 저지른 행위, 명백한 헌법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전북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전북운동본부는 4일 정주시 완산구 객사 사거리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내란에 이어 국민들에게 충구를 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약 100여명(경찰 최초 추산)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본부는 “윤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에 이어 국민들에게 충구를 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약 100여명(경찰 최초 추산)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본부는 “윤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에 이어 국민들에게 충구를 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않았다”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공수부대의 국회 난입·해산 시도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군화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포고”라고 말했다.

단체는 “6시간 동안 유지됐던 계엄령은 60시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 군화발로 전두환(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광주의 그 역사가 재 지워지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수많은 민족 투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를 건설해왔다”며 “어떻게 촛불을 켜고 힘겹게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국민들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 관계자들이 4일 정주시 관동로사거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을 또 다시 배신하고, 또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느냐. 더 이상 윤 대통령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그를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극악무도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이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국민,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정권인 윤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해달라. 우리 단체는 퇴진광장을 열어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